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고용 현황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2008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11월은 ‘사회·연대적 경제(ESS: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의 달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부터 지역단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되어, 2008년에 전국단위로 격상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전략의 한 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부처를 만들고, 브노아 아몽(Benoît Hamon)을 장관으로 임명했다.¹⁾ 그리고 그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의 일자리’²⁾ 계획 중 내년 중에

1) 에로(Jean Marc Ayrault) 내각은 국무총리 산하 20개의 주요 부처를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몇몇 부처에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장관(Ministre Délégué)이 존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 11개의 부처에 17개의 독립 부서 및 위임장관이 임명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이외에 20명의 장관과 18명의 위임장관이 존재한다. 이 위임장관은 보다 좁은 범위의 활동을 하지만, 주요 부처 장관과 동일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잠시 동안 한국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플레르 펠르랑(Fleur Pellerin) 위임장관의 경우, 생산재건부(Redressement productif, 장관 Anaud Montebourg 아르노 몽트부르)에 소속되어, 중소기업과 디지털경제 혁신 부문을 위임받은 장관이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사회연대경제 브노아 아몽 위임장관은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2) Emploi d'avenir, 주로 저학력, 저숙련, 도시 변두리 주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및 정책이다.

정정합니다

지난 11월호의 「프랑스 제조업의 쇠퇴」 p.61 8째줄 “1930년대 호황기에 꾸준히 증가했던~”을 “30년 호황기에 꾸준히 증가했던~”으로 정정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연대경제’ 등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이 분야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정과 활동 모습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제조합(Mutuelle)’, ‘협동조합(Coopérative)’, ‘협회(Association)’ 그리고 각종 ‘재단(fondation)’을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라고 일컫는다. 또한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이나 유기농업 등과 같은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³⁾ 2007년 말 세계 경제위기 이후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어, 이에 대한 많은 출판물 및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에 대한 견해 차는 여전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프랑스에서 이해되고 통용되는 방식과 함께, 이 부문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사회연대경제의 변천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관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고용인구를 기준으로 ‘협회’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79%), ‘협동조합’(13%), ‘공제조합’(5%), ‘재단’(3%)순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역사적 기원을 찾게 되면, 프랑스 혁명 직후 제정된 샤뵈리에 법(La loi Chapelier, 1791)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및 조직의 활동을 금지시킨 이 법은, 현존하는 프랑스 여러 제도들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1864년 단결죄(Délit de coalition)가 폐지되면서, 그리고 1884년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이 법은 폐지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이보다 일찍, 1830년 샤를르 뒤노아에(Charles Dunoyer)의 <Nouveau traité d'Économie Sociale>(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험약)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프랑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공익, 공공선, 혹은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의 연장선이었다(Avise, 2010). 이어 1885년 프랑스 최초 소비자협동조합연맹이 창설되었고, 1898년에는 공제조합 현장이 채택되었다. 1900년 열

3) Alternative Économiques, “ESS sans frontières” 2012년 3월 20일자.

린 만국박람회 ‘Palais de l'économie sociale’ (사회적 경제의 장)에 4,500여 참가자가 모였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경제는 이론적인 지식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활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1년부터는 ‘협회’ 결성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운동, 엠 마우스 협회, 노동자 자주경영, 여성운동, 공정거래운동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기존의 사회적 경제 흐름과는 다른, ‘대안적 연대경제(Économie alternative et solidaire)’의 움직임이 시작된다(Espagne, 2008).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흐름으로까지 확대되었고, 2000년 초 조스팽 총리 시절에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용어를 대체하여, ‘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부차관(Secrétaire d'État)이 임명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헌장이 만들어졌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6월 또다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선 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의 위임장관이 탄생하였다. 사회연대경제란, 네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첫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둘째, 1인 1표제에 기반한 민주적 운영을 통하며, 셋째, 개인적 영리추구를 지양하고, 넷째,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닌다. 이 원칙은 1980년에 채택되어, 사회적 경제헌장(Charte de l'économie sociale)에 기입되었다.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의 이론적 고찰은 대부분 이 분야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했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항하는 1인 1표제 운영방식, 민간 기업으로부터 소외당했지만, 사회적인 효용성이 높은 영역에서의 활동 때문이다.⁴⁾ 그렇지만,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반목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Hély(2008)는 이 부문의 발전을 공공부문의 민영화(privatisation)와 사적 부문의 공공화(Publicisation)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바라본다. 첫 번째의 경우,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했던 공익의 영역이 198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 사회연대경제라는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시민 기업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4)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수많은 출판물, 인쇄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졌고,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저자로는 장 루이 라비(Jean Louis Laville)가 있으며, 그의 최근 저서는 *Agir à gauche :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Suivre de Propositions pour une politique en faveur de l'économie sociale*가 있다.

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단체들과 ‘후원’ 및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며, 공공재 생산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의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근로형태’, ‘임금수준’, 그리고 ‘경력 미래 보장성’ 등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보다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⁵⁾

■ 사회연대경제 현황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보고서(Panorama de l'ESS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⁶⁾에 따르면, 이 부문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2만 3천여 개의 기관과 234만 여 명의 종사자로 표현할 수 있다.⁷⁾ 고용의 측면만 살펴볼 때, 이 수치는 프랑스 전체 고용의 10.3%를, 공공부문을 제외할 경우 13.9%에 해당한다(그림 1). 또한 이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되는 총 임금액은 564억 유로(약 79조 원)의 규모에 달했다. 이 금액은 전체 지불 임금 총액의 8.4%로, 종사자 비중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타 부문보다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한 종사자 수는 전체의 9.7%로 하락한다. 성별 비율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60%, 기타 민간 부문이 40%인 데 반해,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경우 67%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채용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역시 8%로 여타 민간부문 13%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주로 사회서비스⁸⁾ 분야로서, 90만 명이 넘는 인원(39%)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체 종사자 중 62.6%를 차지한다(기타 민간부문 9.5%, 공공부문 27.9%).

5)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저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Matthieu Hély(2009), *Les métamorphoses du monde associatif*, PUF와 Philippe Frémeaux(2011), *La Nouvelle Alternative?*, Les Petits Matins & Alternatives Économiques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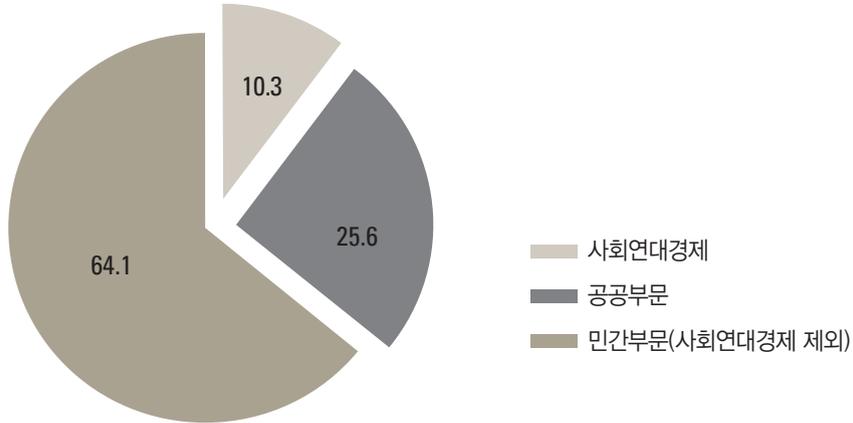
6) 전국사회연대경제 전망소(Observatoire National de l'ESS)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200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출간된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현황'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수치는, 이 세 보고서(2008, 2010, 2012)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출처 표기는 생략하며, 이외의 인용자료만 명시하기로 한다.

7) 또한 이 부문의 경제활동 규모 역시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한다(Challenges 11월 9일자).

8) Action sociale(사회적 활동 및 행동).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대인서비스업이다.

[그림 1] 부문별 취업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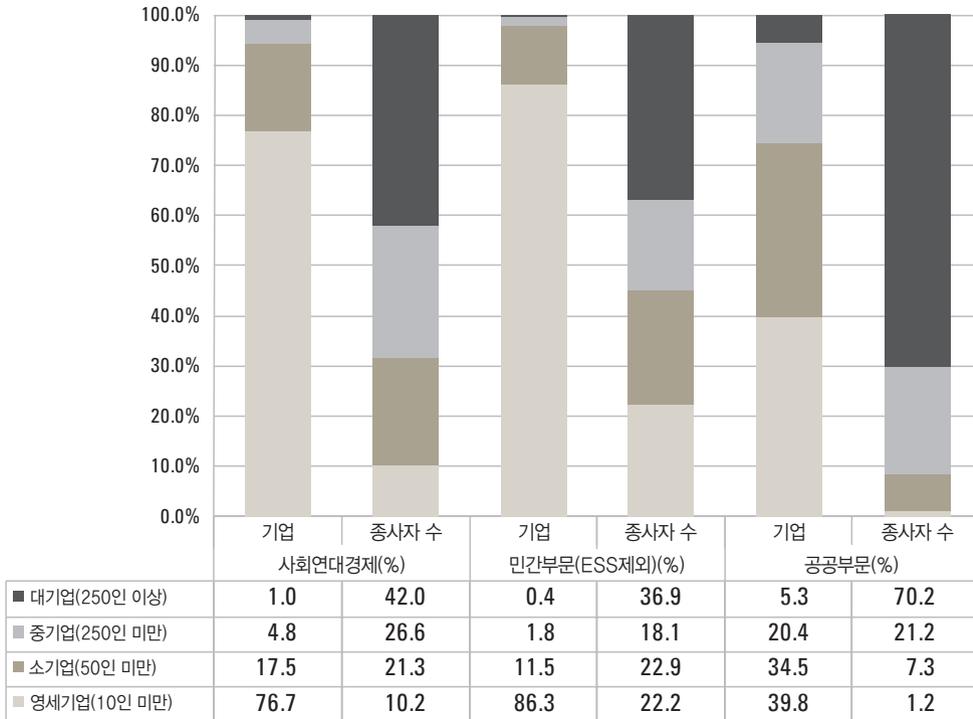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분야 역시 사회연대경제 부문이 56%로, 영역 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활동이 금융·은행·보험업에도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업종 내에서 기타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만, 사회연대경제 부문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 및 조직의 활동이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업 및 공연예술 부문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포도와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2), 프랑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업 및 고용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소수의 대기업(전력, 공항, 철도, 우체국 등)이 대규모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⁹⁾ 이와 반대로, 전체적인 민간부문에서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50인 미만의 기업까지 포함하면 98%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큰 틀에서 민간부문에 속하는 사회연대경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대기업 중 19% 정도가 사회연대경제 부문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이 부문의 대기업 비중은 여타 민간부문에 비해 다소 높다. 또한 부문 내에서, 50인 이

9) OECD (2011),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SOE Sector in OECD Countrie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5.

[그림 2] 기업 규모별 종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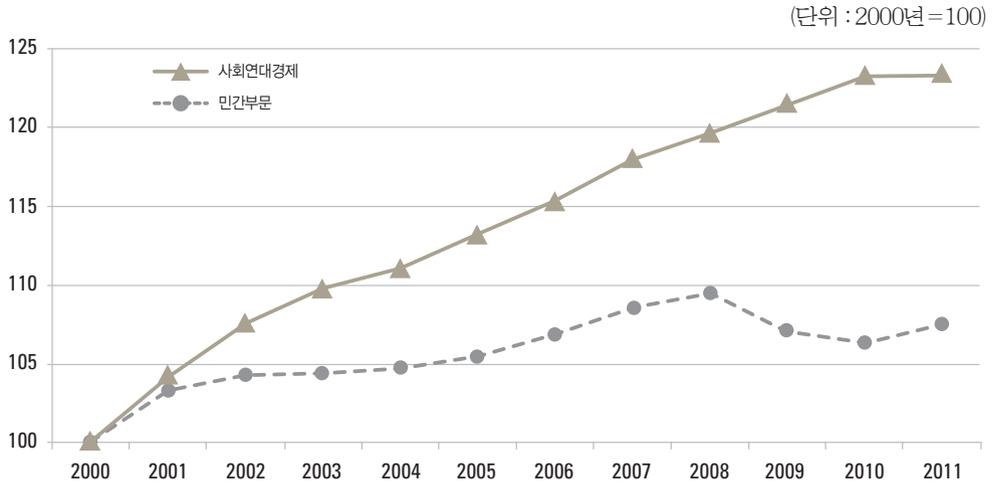


상의 기업이 전체 고용의 69%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타 민간부문에 비해 중·대기업의 고용 공헌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연대경제 부문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조직들이 영세하거나 소규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중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여타 민간부문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기타 민간부문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3]은 이 부문과 기타 민간부문의 고용 증가율을 보여준다. 2000년의 수치를 100으로 할 때, 이 두 부문의 증가율은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3).¹⁰⁾ 2011년까지 기타 민간부문이 7.5%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회연대경제는 22.6%로 연평균 2%가 넘는 성장률을

10) Cécile BAZIN & Jacques MALET, “Économie Sociale : Bilan de l’Emploi en 2011,” Recherches & Solidarités.

[그림 3] 사회연대경제와 기타 민간부문의 고용 변화



자료 : ACOSS-URSSAF et MSA - Traitement R. & S, 각주10 문헌에서 재인용.

기록했다. 특히 2009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2011년 성장률이 0.1%에 그친 반면, 기타 민간부문은 회복세(1.1%)를 보였다.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긴축정책으로 인해 공적자금 지원이 둔화된 까닭이다. 또한 2012년 전반기에는 감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은 고용 전망은 어둡지 않다. 물론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2020년까지 6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종사자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건위생 부문(secteur sanitaire et social)에 중장년층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빈 자리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의미한다. 이 부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대계약(Le contrat de génération)¹¹⁾ 형식으로, ‘미래의 일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¹²⁾

11) 현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서, 중장년층 근로자와 신입사원과의 일대일 짝꿍 관계를 맺어, 그들의 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장년층 고용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Le monde, “Benoît Hamon : Un nouveau modèle de coopérative pour faciliter la reprise d’entreprise”, 2012년 9월 5일자.

■ 맺음말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비단 프랑스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혹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현실 자본주의 체제, 특히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대안 체제를 고민하면서부터 그것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권 및 내각이 들어선 시기에 국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 부문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올해에는 위임장관과 부처가 생성되면서 향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 부문의 확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그 중 한 가지는 현재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고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부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부문의 운영자금 중 50%가량이 공적자금이다. 이에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는 자생력의 문제이다.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대안적인 경제활동 단체가 출현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제기 되는 ‘고용조건’ 등에 대한 비판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KLI**

참고문헌

- AVISE(2010),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Panorama Général et Interventions Régionales”.
- CNCRES(2012), “Panorama de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
- _____(2010), “Panorama de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
- _____(2008), “Panorama de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
- Cécile BAZIN & Jacques MALET(2011), “Économie Sociale : Bilan de l’ Emploi en 2011”, Recherches & Solidarités.
- François ESPAGNE(2008),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histoire et valeurs”, *Forum régional de l’emploi dans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Rhône-Alpes*, Lyon, 2008년 1월 11일.
- Matthieu HELY(2008),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n’ existe pas”, *la vie des idées*, p.14.
- L’ Express(2012. 11. 22), L’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eut-elle démocratiser l’ entreprise?, http://www.lexpress.fr/emploi-carriere/emploi/l-economie-sociale-et-solidaire-peut-elle-democratiser-l-entreprise_1189832.html
- Challenges(2011. 11. 9), L’ économie solidaire, nouveau rempart contre le chômage?, <http://www.challenges.fr/jeco-2012/20121109.CHA2949/l-economie-solidaire-nouveau-rempart-contre-le-chomage.html>